

서울시, 대치동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50층 '초고층 스카이라인' 재건축... 대치~개포 생활권 연결

35층 규제 폐지 첫 적용 전망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 주민 호응
"재건축 사업의 선도모델 기대"

1983년에 준공된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변신한다. 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가로변 상가를 배치해 역세권을 활성화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으로 단절됐던 대치~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 교도 새롭게 만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서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35층 규제' 폐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 '2040서울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



대치 미도아파트 스카이라인 계획안.

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연내 확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약 40년 전에 지어진 미도아파트(19만5080㎡)는 2436세대 규모의 노후 아파트 중 하나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겹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개월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기획안을 마련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 적용으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미도아파트는 양재천과 대치역·학여울역 더블역세권에 맞닿아 있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더한 명품 아파트단지(최고 50층, 3800세대 내외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치~개포 생활권의 대표단지로,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수변·녹지 어우러진 대단지 전망 양재천 적극 활용... 보행교 설치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 신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양재천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분으로 양재천에 보행교를 설치



대치 미도아파트 배치계획안.

/서울시

해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잇는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도아파트는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양재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재천으로 인해 남측 개포생활권과의 소통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대치동 학원가와 은마아파트, 미도아파트, 개포시장을 연결하는 양재천 보행교는 주민 산책로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통학로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기획안은 '2040서울도시 기본계획' 높이제한 완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0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구상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단지 중심부에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양재천, 남부순환로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유형을 도입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보행 친화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형 기자 hjk1@metroseoul.co.kr

"13대 산업 수출 둔화... 1%대 성장률 보일 것"

(반도체·철강 등)

산업연구원 2023년 경제·산업 전망
통화긴축 영향 ↑... 성장률 1.9% 예상

반도체와 철강,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13대 주력산업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2.5%)보다 낮은 1.9%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의 대외 여건에서 통화 긴축 영향의 본격화에 따른 소비 둔화 등 대내 여건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해제와 일상 회복 진전,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불확실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

(내년 국내 거시경제지표 전망)

구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GDP	1.6	2.1	1.9
통관수출	3,257	3,460	6,717
통관수입	3,461	3,522	6,983
무역수지	-204	-62	-266

단위: %, 억 달러

/산업연구원

조 전환 여부, 고물가와 금리 인상, 환율과 금융시장 불안, 무역적자 지속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 영

향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고, 기저효과까지 감안해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22년 대비 상당폭 축소된 연간 266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됐다.

내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부진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할 전망이다.

주력 산업 생산은 조선(42.4%), 철강(1.6%)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등 부정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일정요건 갖춘 고령자·장기보유자 유예 가능

>> 1면 '이제는 일반층...'서 계속

중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중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중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기재부, 대대적 조직개편 추진 재정건전·연금개혁 속도 낸다

기능 조정 통한 업무 효율적 방점
재정분석과·연금보건경제과 신설

기획재정부가 나라빛 관리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연금과 노동, 교육, 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조직 기능도 효율화한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재정총괄부처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정하는 등 재정 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담당인재정기획심의관이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또, 재정전략과는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돼 재정 정책의 총괄·조정,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 등을 맡는다. 재정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 통계 선진화 기능을 맡는 재정분석과도 새로 생긴다.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 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가 신설된다. 연금개혁과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각각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조직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분리된다. 인력정책과는 고용관련 경제정책 조정을, 노동시장경제과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각각 이행한다.

교육분야 개혁은 경제구조개혁총괄과가 맡아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를 협의·조정한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장기전략국은 미래전략국으로 개편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도 새로 생긴다.

기재부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